

국힘 비대위원장 ‘친윤 딜레마’ ... 유승민 구원 등판설

5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거론... ‘탄핵 반대’ 대의 이미지 부담 권성동 “원내·외 모두 열어놓고 고민”...내일 의총서 후보 확정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지만 친윤석열 대통령을 색깔을 완전히 빼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내·외 인사를 모두 열어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전했다.

지난 19~20일 선수별 모임에서는 ‘원내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으나, 권 권한대행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내부에서는 비대위에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당 안정’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경험 있는 현역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점으로 표출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원팀’이 돼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후보군으로는 5선의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거론된다.

다만, 이들이 갖춘 당 운영 능력과 별개로, 각각 ‘탄핵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친윤석열) 색깔이 짙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들 중 한명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원조 친윤’인 권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이끄는 모습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비대위가 당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개혁적인 성향의 원외 인사나 구원투수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 두 명이 연달아 탄핵소추를 당한 상황에서, 당 개혁과 체질 개선을 이뤄냄으로써 조기 대선에 대비하려면 파격적인 인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서다.

당에 오래 몸담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일각에서 거론된다. 유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이 당의 모습이 완전히 망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며 “저는 정말 바꾸고 싶다. 이 당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 강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권 권한대행은 최근 윤 전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가 없지는 않다.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의원들과의 화학적 결합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권한대행은 주말 중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며 비대위원장 후보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출석 요구서·현재 통지 서류·압수수색 수차례 거부...“결단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조수사본부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에 대해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전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공조

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 중이며 관저·집무실 등에 인편·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낸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19차례나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

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회신하지 않았고, 전날 다시 25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현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내란 공범’ ○... ‘이재명은 안돼’ ×

선관위 “지역구 현수막, 대선후보 예견되는 문구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지난 21일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여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야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시를 놓고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연합뉴스

혁신당,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공개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안하면 탄핵해야”

조국혁신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으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혁신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하고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끈 시일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국 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겠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를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